내란 인정하고도 "계획 실패로 피해 적다" 무기징역 감경

윤석열 무기징역 선고 배경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선고로 '12·3 비상계엄'은 내란임이 법적으로 공식화됐다.

하지만, 재판부가 "물리력 행사를 자제시켰다", "대부분 계획은 실패로 돌아갔다"는 등 윤 전대통령 측의 항변을 받아들여 검찰이 구형한 법정최고형 '사형'에서 무기징역으로 감경해 줬다는 점에서 사법부에 대한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특히 김용현 전 국방부장관 등 실질적으로 내란을 기획한 이들에게도 검찰 구형(무기징역)에 못 미치는 징역 30년형을 선고한데다, 항소심·상고심에서 감경받을 여지가 있는 점을 고려하면 '후퇴한 판결'이라는 지적도 거세다.

19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판사 지귀연)는 12·3 비상계엄이 내란죄의 핵심인 '국헌문란 목적'과 '폭동 행위' 두 요건을 충분히 갖고 있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 등이 계엄군을 국회로 보낸 행위, 국회의원 등을 체포하는 등 행위가 헌법에 의해 설치된 국가 기관인 국회의 기능을 마비시키고 상당 기간 그 역할을 제대로 작동할 수 없게 만들기 위한 목적을 갖고 있었다고 판단했다. 윤 전 대통령이 "국회의원들을 끌어내라"고 지시했다는 점도 사실로 인정됐다.

12·3 비상계엄에 대해서는, 내란을 일으켜 국가 존립을 위협하고 헌법 질서를 부정하는 행위로서 합법적인 절차를 무시하고 폭력적인 수단을 통해 국회의 권리 행사를 불가능하게 해 민주주의 근본을 훼손한 행위라고 봤다.

군인·경찰·공무원 등이 사회적으로 비난을 받고 법적 책임도 져야 하는 상황에 놓인 점, 상관 지시의 적법성에 대한 신뢰가 무너진 점 등에서도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는 판단도 내렸다. 윤 전 대통령에 대해서는 별다른 사정 없이 출석을 거부한 점, 사과의 뜻을 내비치지 않은 점 등도 양형에 반영됐다.

'계몽령'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윤 전 대통령 측은 "대통령 권한에 따른 합법적 계엄이었다"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헌법상 비상계엄을 통해 국회, 행정·사법에 대한 본질적인 권한을 침해하지 못하도록 정하고 있음에도, 국회 마비 등을 목적으로 계엄군을 동원했다는 점에서 불법 계엄에 해당한다고 봤다.

또 "국회의 무리한 장관급 인사 탄핵과 예산 절감으로 국가 위기 상황에 놓여 있었다"는 윤 전 대통령 측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국가 위기 상황이라는 판단과 이를 바로잡겠다는 주장은 명분에 불과할 뿐이며, 군을 국회에 보내 국회를 마비시키려는 '목적'과는 구분돼야 한다는 것이다.

재판부가 형량을 깎아주면서 적용한 감경 사유를 놓고 내란의 중대성을 간과했다는 비판이 적지 않다.

피고인들 의지와 상관없이 국민들이 막아내고 일부 군의 소극적 저항으로 실패했다는 헌법재판소 판결에도, 재판부는 '대부분 계획이 실패로 돌아갔다'는 등 이유로 형량을 깎아줬다.

윤 전 대통령과 김 전 장관에 대해서는 "범행 이전에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고, 장기간 공무원으로 봉직해 온 점, 65세의 비교적 고령인 점을 참작했다"고 감경 사유를 밝혔다.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에 대해서는 "현재 별개의 재판이 진행 중인데, 병합돼 판단받았을 경우와 형평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며 "군 투입 등 폭동 행위에는 직접 관여하지 않았다"고 판시했다. 조지호 전 경찰청장,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에 대해서는 계엄 선포 당일에야 군 투입 사실을 알았던 점, 국회 출입 통제 기간이 짧았던 점,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감안해 형을 감경했다고 밝혔다. 국회 출입 통제 기간도 국민들과 국회의 역할로 계엄이 해제되면서 짧아진 점도 감경 사유로 반영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재판부는 특검팀이 제시한 중요 주장과 증거들을 배척하기도 했다.

야당 인사들에 대한 보복·제거 계획, 윤 전 대통령 장기 집권 구상, 북한과 긴장 조성 계획, 계엄 시나리오 등이 적혀 내란 재판의 '스모킹 건'이 됐던 이른바 '노상원 수첩'은 작성 시기를 알 수 없고, 필기 형태가 조악하다는 등 이유로 "중요한 수첩이 아니다"는 판단을 내렸다.

윤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 1년여 전부터 장기 독재를 계획하고 있었다는 특검 주장도 증거가 없다며 배척했다. 비상계엄 준비가 허술하고, 국회 무력화 이후 계획이 없다는 등 이유에서다. 결국, 1심에서부터 윤 전 대통령 측의 주장을 대거 인용해 무더기 감경을 시켜주면서 향후 항소심, 상고심에서 형량이 줄어들 가능성을 남겨줬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광주시민단체협의회는 이날 성명을 내고 "재판부는 국회와 선거관리위원회 침탈 등 방송을 통해 공개적으로 확인된 행위만 유죄로 인정하고 내란 예비 음모 행위, 노상원 수첩 등 수많은 국민을 학살하려 했던 계획, 외환 유치 등에 대해서는 그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시했다"며 "이는 윤석열과 함께 내란을 획책한 주요 임무 종사자들에게 면죄부를 부여하는 일"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민주주의 수호 의무를 내팽개치고 국헌을 문란케 해 대한민국을 벼랑으로 내몬 자에게 사형을 선고하지 않은 것은 최소한의 정의조차 실현하지 못한 일"이라고 강조했다.

/유연재 기자 yjyou@kwangju.co.kr

내란죄 핵심 '국헌문란 목적'·'폭동 행위' 요건 충분

국회 기능 마비 목적 계엄군 동원은 불법에 해당

'국민 계몽령…합법 계엄' 윤측 주장 받아들여지지 않아

물리력 행사 자제·범죄 전력 없고 고령 참작 감경 비판

윤석열 내란 우두머리 혐의 주요 쟁점별 1심 판단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 윤석열 전 대통령에 내란 우두머리·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무기징역 선고**

	특검 주장 사형	윤석열 측 주장	1심 판단 무기징역
비상계엄은 내란인가	비상계엄의 목적과 구체적 실행 양상 모두 내란 요건 충족	법적으로 비상계엄은 내란죄 구성요건 불충족	**국헌문란 목적 및 폭동 인정. 윤석열 내란 우두머리죄 성립**
비상계엄 선포 위법성	반국가 세력에 의한 중대한 헌법질서 파괴 사건	계엄 선포는 대통령 고도의 통치 행위. 사법심사 대상 될 수 없음.	**국회 권한 침해했으면 내란죄 해당**
국헌문란 목적 계엄 선포	권력 독점·장기 집권 시도 및 자유민주적 기본질서 파괴 목적	야당 경고를 위한 상징적 조치, 국헌 문란 의도 없었음	**국헌문란 목적 인정 (장기독재 목적 불인정, 국회 기능 마비 목적 인정)**
폭동 행위 발생 여부	국회와 선관위에 군·경찰 투입해 점거, 출입 통제, 체포 시도 등 행위는 폭동	계엄 해제 의결 직후 군 및 경찰력 해제해 폭력행위 수반되지 않음	**계엄 선포, 국회 봉쇄, 포고령 공고 등 '폭동'에 해당**
공수처 수사 적법성 여부	법원이 공수처가 청구한 영장 발부. 수사에 문제 없음	공수처에 내란죄 수사권이 없어 위법한 수사와 기소	**공수처도 내란죄 수사 개시 가능. 검찰의 내란죄 기소 위법하지 않아**

연합뉴스

19일 오후 광주 서구 광천동 버스터미널 대합실에서 시민들이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1심 선고공판 TV 생중계를 시청하고 있다. /김진수 기자 jeans@kwangju.co.kr

지귀연 '날짜 아닌 시간 계산' 尹 석방 거센 비판…총 43차례 공판·증인만 61명

尹 내란재판 443일의 기록

19일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은 지난 1년 2개월 동안 숱한 논란과 파음을 남겼다.

재판부의 이례적인 구속취소 결정은 외부 공세의 빌미가 됐고, 피고인 윤 전 대통령의 불성실한 재판 참여 태도는 매번 비판의 중심에 섰다.

윤 전 대통령의 재판은 헌법재판소 파면 결정 직후인 지난해 4월 시작돼 지난달 결심까지 총 43차례 열렸다.

재판장 유흥주점 접대 의혹·가벼운 언행 지적…피고인들 태도도 논란

체포조 부대원과 사령관 등 61명이 증언대에 섰으며, 지난해 12월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조지호 전 경찰청장 등 수뇌부 사건과 병합되면서 160여 명의 증인이 재판을 거쳐갔다.

재판장인 지귀연 부장판사는 지난해 3월 윤 전 대통령 구속을 취소하며 거센 후폭풍을 맞았다. 구속 기간을 날짜가 아닌 시간 단위로 계산해 기소가 만료 이후 이뤄졌다고 본 것이다. 이는 통상적인 법조계 관행을 깬 결정으로 여당의 맹렬한 비판을 샀다.

더불어민주당은 지 부장판사의 유흥주점 접대 의혹을 제기하기도 했다.

대법원 조사 결과 개방된 식당에서 15만 5000원을 직접 결제한 뒤 라이브 카페로 이동한 것으로 확인돼 직무 관련성은 부인됐다. 하지만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압수수색까지 이어지는 촌극이 빚어졌고, 이는 오는 23일 출범할 내란전담재판부 신설의 도화선이 됐다는 분석이다.

재판장의 가벼운 언행도 도마 위에 올랐다. 피고인 측을 적극적으로 제지하지 않거나 농담을 던지는 진행 방식이 국기 문란 사건의 무게감과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다. 지난달 공판에서는 검찰과 변호인 간 다툼이 일자 어른스럽지 못한 태도를 삼가라며 핀잔을 주기도 했다.

피고인들의 태도 역시 논란을 키웠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해 7월 재구속된 이후 4개월 가까이 16차례 연속 재판에 나오지 않았다. 자신에게 불리한 증언이 나오는 시점에야 비로소 법정에 모습을 드러냈다.

결심 공판을 앞두고는 김 전 장관 측이 증거조사에만 8시간을 쏟아부으며 의도적인 시간 끌기에 나섰다. 일각에서는 이를 두고 법정 내 합법적 의사 진행 방해라는 비판이 쏟아졌다. 해당 변호인은 개인 인터넷 방송에서 윤 전 대통령 측의 변론 시간을 벌어주기 위함이었다는 취지로 발언해 논란을 가중시켰다.

윤 전 대통령은 재판 내내 비상계엄이 야당의 횡포를 알리기 위한 경고 차원이었다는 주장을 반복했다. 최후진술에서도 국가적 혼란에 대한 사과 대신, 실탄 없이 어떻게 내란을 일으키겠느냐며 끝내 책임을 회피하는 모습을 보여 씁쓸함을 남겼다.

/연합뉴스

중앙신용

못 받은 돈 회수

※ 1년 이상 다른 신용정보회사에 의뢰 후 못받으신 건도 가능합니다!

특수채권 담당자 전문 추심합니다.

27년 경력 국가공인 신용관리사가 직접 관리합니다.

선수금 출장비용 없음

(재산조사비, 법적비용은 필요에 따라 발생될 수 있음)

- 전세보증금, 경매건 및 미배당채권, 상속채권 전문 회수
- 분양대금 연체 등, 채무자(신용)재산조사만 의뢰 가능
- 법인공사대금, 각종 외상 미수금 회수 전문

전문추심인 직접관리

판결문, 공증·공사대금·각서·운송료·차용증
거래장부·계약서·입금 내역·녹취 등 각종채권상담

중앙신용정보 직통전화 062)521-4109 010-2785-0073

지역 총판 모집 안내

창업을 꿈꾸는 분들을 위한 새로운 기회

국내 최초 렌탈공급 등록 업체

DB 1억원 배상책임보험
증권번호:120251388541
장애인 인증:제2024-089

주요 공급 대상
▶ 초·중·고·대학교, 각계 정부기관, 군부대, 종교
▶ 기독교, 천주교, 불교, 대기업, 삼성, LG, SK 등 기타
▶ 교실, 강의실, 강당, 회의실, 세미나실 등

사업의 강점
▶ 국내 최초 렌탈 및 정부조달 방식으로 무한 수익창출
▶ 교육기관 및 행정 공공기관, 군부대, 종교단체, 대기업
▶ 시장 안전성, 지속적 성장 특별 초기 참여분께 우선권 제공

창업 기회대상
▶ 다년간 행정 공공기관 및 교육관련 유사 직종 퇴직자
▶ 교육 행정기관, 군부대근무 종교단체 지역 기반 경력자
▶ 조직관리 지역총판, 새로운 창업 희망자 우대

MK 엠케이솔루션㈜ 연락처 : 010-2366-8843

상속한정승인공고

- 피상속인 : 망 김태규(410601-1XXXXXX)
- 최후주소 : 전남 영광군 영광읍 천년로13길 18-4 A동 201호 (삼현주택)

피상속인 망 김태규의 상속인은 위 피상속인의 재산에 대하여 상속한정승인을 광주가정법원 2026느단3130호로 신청하여 2026년 2월 10일 심판 인용되었으므로 피상속인에 대한 일반채권자 및 수증자는 공고일로부터 신고기간내에 채권신고를 하시기 바라며 위 기간이 지나면 청산에서 제외됩니다.

2026년 2월 20일

- 상속인 : 오원순(460106-2XXXXXX) 전남 영광군 영광읍 천년로 13길 18-4 A동 201호(삼현주택)
- 신고기간 : 2026. 2. 20. ~ 2026. 5. 2.
- 채권신고처 : 상속인 오원순의 주소

자본감소 및 주권제출공고

당 회사는 2026년 2월 13일 주주총회 결의로 자본의 총액 금1,210,000,000원 중 금1,200,000,000원을 감소하여 자본금 10,000,000원으로 하기로 결의하고, 그 방법으로 발행주식총수 121,000주 중 120,000주를 희망하는 주주로부터 1주당 금10,000원에 매수 유상소각하여 총 발행주식 121,000주를 1,000주로 감소할 것을 결의하였습니다.

이 자본감소에 이의가 있는 채권자는 이 공고 게재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관계 회사에 이의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2026년 2월 20일

일진건설 주식회사
전라남도 화순군 화순읍 쌍충로 122
대표이사 박 순 희

kwangju.co.kr
光州日報
광고문의 (062) 227-9600
예향구독 (062) 220-0550